

시민 안전 위협하는 현장민원 신속 대응 주문

조지훈 전주시장, 민선9기 첫 간부회의 통해 즉시 신고 체계 구축 당부

조지훈 전주시장이 민선9기 첫 간부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민원에 대한 즉시 신고·대응 체계를 갖춰 불편을 신속히 해소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와 함께 조 시장은 여름철 급경사지와 산사태 우려지역 등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현장 확인과 주민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조지훈 시장은 6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부시장과 실·국장, 전주시정 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선9기 첫 간부회의에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고, 태풍 북상 등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많은 비로 우자라 신호등 등 교통표지판을 가리는 가로수와 많은 비로 인한 우수 배수 문제, 전기 누전 등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나 발견 즉시 신고하고 접수·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훈 전주시장이 민선9기 첫 간부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민원에 대한 즉시 신고·대응 체계를 갖춰 불편을 신속히 해소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는 시민들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편의를 타협하지 않고, 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곧바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조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조 시장은 자신도 거리를 지나며 확인한 현장민원을 생활민원 신고 창구(120)를 통해 직접 접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직자 모두가 시민 불편 사항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민원의 신속한 접수와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특히 조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 누구나 생활 속에서 확인한 현장민원과 안전 우려사항 등을 그 자리에서 전화뿐 아니라 간단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를 통해서도 즉시 신고해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시는 기존에 운영해 온 전주시 생활민원 신고(120) 창구뿐 아니라, 현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공용 8272(빨리처리) 휴대전화(시: 010-4799-8272, 완산구: 010-4172-8272, 덕진구: 010-4179-8272)을 통해서도 시민 누구나 사진 및 전화로 민원을 접수토록 조치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현장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를 통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행정의 답은 결국 현장에 있으며, 시민의 불편과 지역의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그 해답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민선 9기 시정의 기본 방향"이라며 "간부 공무원들이 먼저 현장을 찾고,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행정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신뢰받는 의정! 행동하는 의회!'

전주시의회, 새 슬로건과 함께 공식 의정 활동 시작

전주시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회 개원과 함께 새 슬로건을 확정하고, 공식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6일 시의회는 시민으로부터 한층 더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해 직접 발로 뛰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는 의미를 담아 새 슬로건을 '신뢰받는 의정! 행동하는 의회!'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같은 슬로건 확정에 이은 첫 행보로 이날 오전 전주군 경포지를 찾아 순국선열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는 참배와 함께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의회는 군경묘지 참배에 이어 이번 주 전북특별자치도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주교육지원청, 경찰관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을 방문해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설명



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주만 의장은 "새 슬로건과 함께 전주시의회가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맛배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도입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배달시장 진출 지원 도모

전주시 공공배달앱인 '전주맛배달'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앞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 이하 진흥원)은 '전주맛배달'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스템을 전주맛배달에 연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이 도입됨에 따라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은 전주맛배달을 새로운 판매채널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온누리상품권 이용 고객의 신규 유입을 통해 매출 증대와 고객층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주맛배달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기존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외에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배달·포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결제 수단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전주맛배달 이용 편의성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시는 진흥원은 이번 결제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정부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주맛배달은 디지털 온

누리상품권 결제 서비스 도입을 기념해 시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이벤트 기간 전주맛배달 앱에서 2만 원 이상 주문한 이용자에게 선착순으로 5000원 할인쿠폰이 지급된다.

허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서비스는 단순히 결제 수단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 전주맛배달 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진흥원은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는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소상공인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안전보안관, 재난·안전 집중신고제 홍보 나서

전주시 안전보안관들이 시민들에게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와 신고 방법을 알리는 현장 홍보활동에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 5일 전주역 일대에서 20여 명의 전주시 안전보안관들과 함께 '여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전주역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여름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안전 위

험요소와 안전신문고 신고방법을 알리고, 안전신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안전보안관들은 전주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등 여름철 집중신고 대상 4개 분야와 안전신문고 이용 방법을 집중 안내했다.

특히 △막힌 빗물받이와 시설물 파손 △트사 유출과 낙석 위험 △그늘막·무더위워터·음수대 등 파손 △



인명구조환 관리 미흡과 물놀이시설 파손 등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 사례를 알리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안전보안관들은 집중신고

제 안내와 함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주시민이면 자동 가입되는 '전주시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과 문의처가 담긴 접이식 부채 500여 개를 배부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필요한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주시 안전보안관은 이번 전주역 캠페인을 시작으로 오는 18일 전주연꽃문화제가 열리는 덕진공원 등 오는 8월까지 공원과 전통시장 등 시민이 많이 생활권 거점을 찾아 홍보활동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47개 측량업체 대상 지도·점검 실시

전주시는 부실 측량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 30일까지 일반측량업과 공공측량업, 지적측량업 등 등록된 47개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측량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업체의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측량업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업 등록증 및 정비불법 대여 행위 △상호·대표자·소재지 등 변경 신고 이행 여부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우선 각 업체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표를 송부해 1차 서면 점검을 진행한 뒤, 서류 미제출 업체나 부실 징후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